



# 8,800억 엔 규모의 2차 경기부양대책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일본 정부는 오는 30일 각료회의를 통해 8,800억 엔 규모의 경기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지 신문이 보도함.

- 이는 지난달 26일 7,500억 엔<sup>1)</sup> 규모의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으로 최근 중국의 반일감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국 기업들에 달러 자금을 용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음.
  - 이번 대책은 올해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를 사용한 대책과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엔고대책 등으로 구성되며, 특히 해외에 진출했으나 재해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달러자금 용자제도가 포함된 것이 특징임.
- 달러자금 용자제도는 일본은행이 금융회사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한 후 은행이 기업에 달러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임.
  - 기업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엔을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엔화 값 약세를 유도할 수 있음.

■ 이번 경기진작책은 중국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출 감소와 엔고라는 일본 경제의 핵심 현안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의도임.

-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최대 10조 엔 규모의 달러자금을 마련해 기업들의 해외 M&A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었으나, 이번 대출조건에 해외진출 기업의 사업 연속성 지원이라는 명목을 추가해 중국 관련 피해 기업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남.
  -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일본 국내에서 달러 매도-엔 매수 환전이 증가해 엔고를 부추기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도 중국 사업을 지속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임.

1) 일본 정부는 지난 달 26일 국가재정 4,266억 엔, 지방자치단체의 3,274억 엔을 합쳐 총 7,500억 엔의 경기진작책을 내놓은 바 있음.

- 한편, 센카쿠 국유화 조치 이후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9월 14.1%, 10월 11.6%로 감소했으며, 자동차산업도 10월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82%나 급감해 일본기업들의 중국사업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.

(니혼케이자이 외, 11/28)